

제57회 과학의 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기자회견

-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Korean Union of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 workers (KUPST)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프로그램>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10시 30분
- 장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

2. 진행 순서

1) 참가자 소개

2) 대표 발언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최연택 위원장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이창재 과학기술본부장

3) 과학기술계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발표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이상근 지부장

4) 질의응답

3. 첨부 자료

- 제57회 과학의 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기자회견문
- [별첨1]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요구안
- [별첨2] 정당별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제57회 과학의 날 기자회견문

-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불통과 독선, 무능력에 대한 성난 민심이 심판을 내린 결과이며,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비판의 목소리와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 개선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출범 당시 약속과는 정반대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급기야는 국가 R&D 예산을 무려 4조 6천억 원이나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거나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선심성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갑작스럽게 예산을 삭감하여 연구 현장을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막연하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이나 그럴듯하게 포장된 혁신 방안이 아닌, 구체적으로 R&D 예산 복원 방안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57회 과학의 날을 맞아,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과학기술계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우리 노동조합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연구기관 공공성·자율성 확대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운영지침, 혁신지침 등에 의해 예산, 인력, 복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엄격히 제한받아 왔다. 2023년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UNIST, DGIST)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2024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나, 아직까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받고 있다. 최근 과

기정통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기특성화대학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일방적 통제에서 탈피하여,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와 통제 위주가 아닌, 과학자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및 운영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침이나 훈령 뿐만이 아닌,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원법 등을 개정하여 연구기관의 안정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내용이 법률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되지 않도록 연구 현장과 실무적인 소통을 충분히 거쳐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안정적 지원

지난해 6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비롯되어 4조 6천억원 삭감된 국가 R&D 예산에 대해서, 정부와 주요 정당들은 모두 R&D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예산 복원과 더불어 향후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의 일정 비율을 R&D 예산으로 확정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정부와 여당에서도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연구 현장을 큰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도시 대전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다.

현재 2025년 R&D 예산 규모 산정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는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고, 내년도 R&D 예산은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의 전면 복원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대폭 늘리겠다는 식의 선심성 발언만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를 제시하고 연구 현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내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일방적 연구비 삭감으로 현재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어려워진 연구과제들에 우선 지원하여,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한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여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공공연구부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지원과 더불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연구활동에 대해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제도인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 중심의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연구인력의 인건비조차 경쟁을 통해 수주해야 하는 구조로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을 저해하는 일이나, 연구기관에서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워 장비 운용에 곤란을 겪는 일은 당장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 고정 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만큼은 경쟁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연구사업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말고 기관 기본 예산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정권에 따라 혹은 정부 조직 변경 등에 따라 과학기술계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회에도 (가칭)과학기술처를 상설 조직으로 설립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계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고 (가칭)연구원평의회를 설치하여 연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적 운영을 통해 출연연을 자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연구기관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진작

공공부문에서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서는 기관장 선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공백을 초래하여 연구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만성적으로 당연시되어 버린 기관장 선임 지연에 따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강행규정을 마련하여 반드시 기한 내 선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연구 현장을 위한 기관장이 선임되어 중장기적 비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 및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 과정에 현장 구성원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의무 사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연구기관의 리더십 확립과 더불어, 연구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위상

회복과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이탈은 매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전체적인 연구 역량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우수 연구자를 영입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사자에 대한 획기적 처우 개선 없이 인재 채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처우 개선과 과학기술의 위상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인력 뿐 아니라 연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지원인력 역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무기계약직,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과학기술계 위상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고, 현재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이번 총선을 계기 삼아 조속히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 대해서도 앞서 제안한 주요 의제들을 반영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4월 1일과 2일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각각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강한 개혁에 대한 약속으로 약진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연구개발비 삭감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연구 현장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란다.

우리 노동조합은 제57회 과학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국회에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구 현장과의 꾸준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통한 신속한 실현을 촉구한다.

2024. 4. 18.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별첨 1]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요구안

1.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배경 및 현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권한 및 획일적 통제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지정되었으나 여전히 기타공공기관에 속하고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의 획일적 통제 문제는 개선되지 못함.
- 2023년 4대 과기원(KAIST, GIST, UNIST, DGIST)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나, 이후 과기원 특성에 맞게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받고 있음.
- 2024년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연연에 대한 새로운 운영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중임.
- 공공연구기관들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의 공공성·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요 요구사항

▶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및 출연연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 명문화

- 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에, 출연연의 지원·육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강화하여 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 특히, 출연연의 자율성·독립성·책임성 등을 위한 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성에 치중한 관리의 측면보다는 창의성과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4대 과기원법 개정 및 과기원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 명문화**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4개의 법률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4개 기관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단일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기원은 교육 및 인재 육성뿐 아니라, 연구개발도 주요 임무이나, 현행 법률은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 위주이며,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이나 교원이 아닌 연구인력에 관한 내용이 미흡함. 과기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에 관한 내용도 보완되어야 함.

▶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이를 근거로 준용되었던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 연구기관들을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통제해 왔던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서 전면 탈피하여,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안정성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이 충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주된 요인인 총인건비제 및 각종 복지제도 등에 관한 제약은, 현장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탈을 유발하여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에게 의한 일방적 설계가 아닌, 연구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개선안 마련**

-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관련 정책들이 주로 정부 관료나 기관 사용자들 중심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연구 현장 종사자들과의 소통은 형식적 발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정부 관료 중심의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현장과 실무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 교환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 **나머지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의 추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 아직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지 않은 나머지 연구개발목적기관들에 대하여, 각 기관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추가 지정 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계 출연연들과 그 특성과 구조가 유사한 기관들(기초과학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우선적으로 지정 해제해야 함.

2.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 배경 및 현황

- 2024년도 국가 총 예산은 2023년도보다 증액되었음에도, R&D 예산은 무려 4조 6천 억원 삭감되었음.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예산은 2027년에 이르러서야 2023년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R&D 예산삭감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구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됨. 또한,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어,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임.
- 계속과제에 대한 이유 없는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연구 과제들의 정상적 수행도 어려워짐. 또한, 다수 연구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 경비(인건비, 공공요금 등)마저 부족해진 상황에 처했으며, 부족해진 예산을 채우기 위해 현장 연구자들은 신규 과제 수주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음.
- 국제협력 연구가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도 않음에도, 현 정부의 글로벌 협력 연구 강조 기조에 따라, 새로운 연구과제들은 반강제적으로 불필요한 해외 기관을 억지로 포함하여 기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연수인력(Post-Doc, 학연직,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등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기관 별/과제별 상황에 따라 우선 감원될 우려가 있음.
- 현장 연구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연구기관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됨.
- 현 정부는 예산삭감 이후, 앞으로는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산을 복원하는 방안이나 연구 현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음.

○ 주요 요구사항

▶ 일방적으로 삭감된 R&D 예산을 2024년도 연내에 추경을 통해 추가 복원하고, 2025년도 예산부터는 전면 복원 및 추가 증액

- 2024년도 연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 필수적 경비를 충당하고 기본적인 장비 구매·운용을 비롯한 연구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을 집행하여 연구개발을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 지원해야 함.
-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R&D 예산을 기본적으로 2023년도 수준으로 전면 복원하고, 분야별로 검토하여 추가 증액안을 마련해야 함.
- 이번 R&D 예산삭감으로 인해 기존 연구과제의 수행도 막막해지고 더 많은 신규과제

를 수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연구 현장을 다시 안정시키고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R&D 예산은 반드시 즉각 복원되어야 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검토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시 수립해야 함.
- 특히 R&D와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드시 신속하게 전면 복원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함.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안정적 R&D 투자를 보장하는 조항 신설

-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갑작스러운 일방적 삭감을 방지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R&D에 대한 안정적 투자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 함.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에도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함.
(예) 국가재정의 일정 비율을 R&D 예산으로 보장 등)

▶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의 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R&D 혁신방안 추진 중단, 연구 현장과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정책 마련

- 정부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삭감과 더불어 여러 가지 R&D 혁신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준비되지 않은 채, 일단 발표하고 나서 뒤늦게 내용을 기획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연구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하향식(top-down) 국제협력 연구의 추진이나,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등, 연구 현장과 동떨어진 채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은 중단되어야 하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술연구센터(NTC)' 도입 역시 충분한 사전 기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엽적이고 즉각적인 방안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랜 기간 각계에서 지적되어 온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분석한 제대로 된 혁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3. PBS 폐지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 배경 및 현황

-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는, 효율과 경쟁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공공연구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음. 지금까지 PB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도를 제안하는 수많은 연구자료 및 정책 제안들이 등장했으나, 실질적 개선이 추진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들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경상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조차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탁사업을 수주하여 채워야 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 업무수행뿐 아니라 기본적인 기관 운영의 안정성마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 현 정부 구조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음. 때문에 정권의 이익에 따라 과학기술계가 좌지우지되거나,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 등이 추진되는 한계가 있음.
- 현재 25개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을 자율적으로 지원·육성·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권한과 역할이 부족하며, 정부 부처의 영향을 크게 받아 독립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주요 요구사항

▶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전면 혁신하여 새로운 연구자 중심의 Post-PBS 제도 마련

- PBS는 오랜 기간 운영되며 그 폐해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제도이며,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수차례 PBS 개선을 이야기해 왔으나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음.
- 현행 PBS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벗어나 국가연구개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연구자 중심의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법률로 보장

- 공공연구기관들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 경비조차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여 심지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의 만성적 경영 불안에 시달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은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 인건비나 기관운영비의 불안정성은 결국 연구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유발하여 연구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필수적 고정 경비인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는 연구사업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말고 기관 기본예산으로 보장해야 함.

▶ 정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치

-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부처에 종속되지 않고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함.
- 학계·산업계와 구분되는 공공분야의 연구개발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임무를 부여해야 함.
- 특정연구기관법, 각종 연구관리전문기관들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 연구기관마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설립 근거 법률 등, 현재 우리나라 공공분야 연구기관들에 관한 법률들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음. 공공부문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들을 전면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회 과학기술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내 (가칭)과학기술처 설립

- 국회 내 과학기술분야 정책에 관한 상설 전문조직으로 (가칭)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국회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책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운영구조를 개편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가칭)연구원평의회를 설치하여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단순히 정부 대변자가 아닌 출연연을 자율적으로 지원·육성·관리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임무를 재설계하여 부여해야 함.
- 연구회의 전문역량을 보완하고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선출하는 대표들로 구성하는 (가칭)연구원평의회를 설치하여 운영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함.
-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여, 현 당연직 정부 관료 이사를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혹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민사회 추천 이사, 평의회 추천 이사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4. 출연(연)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진작책 마련

○ 배경 및 현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의 기관장 임기 종료 후 후임 선임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기관장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선임 전까지는 기관장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도적인 기관 운영은 어려우며 사실상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 출연연 기관평가 및 기관장 선임 과정에,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자들은 유사 분야 민간·학계 등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이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특히 R&D 예산삭감으로 인해 이러한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출연연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처우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기관 총인건비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동출연법인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과학기술보안관리단은,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으나, 여전히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요구사항

▶ 기관 운영 공백을 초래하는 기관장 선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원칙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에서 기관장 선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정부에서 선호하는 인물로 선임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권 교체 때마다 기관장 선임이 반복적으로 지연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강행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해야 함.

▶ 기관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 평가를 반영하고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현장 구성원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 반영

- 현장 중심의 평가를 위해, 기관평가 시 기관장 리더십 항목에 현장 구성원들의 평가를 배점으로 반영해야 함.
- 기관장 선임/연임 과정에서 현장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구성원 설문조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선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연구 현장 구성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인건비제를 비롯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임금 및 처우 현실화, 다른 유사·동종업계 수준으로 초임 상승, 우수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공공기관의 제약에 따라 폐지된 각종 복지제도들의 복원 및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IMF를 거치면서 일방적으로 축소된 정년을 다시 만 65세까지 환원하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함.

▶ **연구기관 무기계약직 등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고 처우 개선**

- 출연연 무기계약직은 그 직무에 따라 정규직과 유사·동종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난이도나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하게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도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총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무기계약직의 차별 시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추가 집행을 인정하고,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추진해야 함.

▶ **연구기관 자회사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

- 아직까지 정규직 혹은 자회사로 전환되지 못한 채 용역으로 남아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수 출연연에 있으나, 전환 논의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음.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함.
- 출연(연) 공동출연법인은 각 출연연 행정부장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구성 문제나 예산 운영의 제약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처우 개선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보다 면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이들 공동출연법인을 비롯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별첨 2]

정당별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개혁안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하여 출연연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 ▶ 4대 과기원법을 개정하여 과기원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 ▶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기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 ▶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설계가 아닌, 연구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 ▶ 나머지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의 추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2.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 ▶ 일방적으로 삭감된 R&D 예산을 2024년도 연내에 추경을 통해 추가 복원하고, 2025년도 예산부터는 전면 복원 및 추가 증액한다.
-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안정적 R&D 투자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의 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R&D 혁신 방안 추진을 중단하고 연구 현장과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3. PBS 폐지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 ▶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전면 혁신하여 새로운 연구자 중심의 Post-PBS 제도를 마련한다.
- ▶ 공공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법률로 보장한다.
- ▶ 정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 ▶ 국회 과학기술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내 (가칭)과학기술처 설립을 추진한다.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운영구조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4. 출연(연)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진작책 마련

- ▶ 기관 운영 공백을 초래하는 기관장 선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 기관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 연구기관 무기계약직 등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 ▶ 연구기관 자회사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이 개 호

위원장 최 연 택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협약

조국혁신당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개혁안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설계가 아닌, 연구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 무분별한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의 추가 공공기관 지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2.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의 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R&D 혁신방안 추진을 중단하고 연구 현장과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3. PBS 폐지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전면 혁신하여 새로운 연구자 중심의 Post-PBS 제도를 마련한다.
-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운영구조를 개편한다.

4. 출연(연) 리더십 개선 및 구성원 사기진작책 마련

- 기관 운영 공백을 초래하는 기관장 선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연구기관 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 평가를 반영하고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현장 구성원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기관 무기계약직 등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2024년 4월 2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 연 택

최 연 택

조국혁신당

대표 조 국
(정책위원회 의장)

서 왕 진